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2017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쓰인 여섯 편의 각 분야별 북한경제 관련 논문들을 총괄하는 것이다.¹⁾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개별 논문들의 내용을 하나로 집약하고, 이렇게 집약된 내용들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의 이야기 틀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분야별 논문들이 말하는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총망라하여 이에 대한 공통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각 분야별 북한경제 논문들이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일치하고 조화로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실질적 작업은 앞서 언급한 여섯 편의 논문들을 개념적으로 해체하여 이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2017년과 2018년 북한경제의 기본적 추세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추세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 추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경우, 이들을 어떻게 화해시켜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분야별 분석 논문들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추세들을 세 가지의 단어로 집약한다. 그것은 바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 전망’이라는 단어들이다. 2017년의 북한경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1)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게재될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등을 참고하라.

인해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만일 이러한 대북제재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지속된다면 2018년의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들 분야별 논문들 속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여러 경제추세들 가운데 서로가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에 관한 한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매우 뚜렷하게 제반 경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들 세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2017년과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총괄하되, 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본고의 나머지 부분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은 2017년 북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산업 생산, 농업 및 시장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체 경제와 각 분야별 경제추세로 나타나는지를 토론한다. 3장은 2018년 북한경제를 간단히 전망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8년에도 계속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강화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의 북한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4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명제로 집약하여 제시한다.

II. 2017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 평가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2016년 북한경제와 대비된다.²⁾ 양자는 모두 점점 더 강력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외부적 환경을 공통의 요인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에게 많이 달랐다. 2016년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거나, 설사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은 경제가 진행될수록 약화되어 북한경제는 나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2017년의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매우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2017년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2) 2016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이석, 「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를 참고하라.

1. 대외무역 — 현실화된 대북제재의 충격

2017년 북한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³⁾ 실제로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 9월 이후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 역시 기존의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은 물론 섬유 및 수산물 등 거의 모든 북한의 주요 수출품 거래를 전면 규제하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같은 강력한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이른다. 이는 2017년 초반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수출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거의 봉쇄의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권 밖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되어 온 북한의 수입 역시 2017년 들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을 제한한 앞서의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이후에는 이러한 대중수입 규모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과 9월의 경우 북한의 대중수입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그 하락 폭은 전년 대비 약 6%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 폭은 2017년 10월에는 전년 대비 15%, 11월에는 18%, 그리고 12월에는 23%로 점점 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적어도 2017년 10월 이후에는 북한의 대중수입에도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대북제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수출이 연초인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거의 봉쇄되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데다, 그간 제재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평가되어 온 북한의 수입 역시 하반기인 8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로 갈수록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3)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정형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을 참고하라.

<표 1> 2017년 북한의 월간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2017.01	201.1 (13.3)	241.5 (14.5)
2017.02	172.8 (6.7)	151.9 (-5.9)
2017.03	109.3 (-52.3)	328.0 (39.1)
2017.04	92.9 (-42.4)	288.2 (7.5)
2017.05	115.89 (-34.0)	319.8 (33.6)
2017.06	152.43 (-27.6)	326.8 (13.4)
2017.07	150.4 (-33.8)	299.8 (55.7)
2017.08	282.9 (-1.00)	316.0 (-6.1)
2017.09	137.3 (-39.9)	266.3 (-6.7)
2017.10	85.1 (-63.0)	244.1 (-14.8)
2017.11	99.73 (-61.0)	287.8 (-18.0)
2017.12	50.8 (-82.6)	257.7 (-23.3)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22).

2. 산업생산과 농업 — 침체 또는 위축

대외무역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북한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침체 또는 위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관찰이다. 우선 한국의 농촌진흥청 등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약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가뭄과 같은 불리한 일기조건과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수입의 정체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 조건이 전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6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정곡 기준으로 390만 톤을 상회할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는 점에서 2017년의 농업 생산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식량 사정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북한의 농업 생산 추이

구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콩류	잡곡	
재배면적 (천ha)	1,869	571	711	343	85	131	28	
수량 (kg/10a)	-	384	246	160	187	122	70	
2017년 생산량(만톤) (A)	471	219	167	53	15	15	2	
2016년 생산량(만톤) (B)	481	222	170	55	17	15	2	
2016년 대비	증감량(만톤) (A-B)	△10	△3	△3	△2	△2	-	-
	증감비율 (%)	△2	△1	△2	△4	△12	-	-

주: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의 (표 1)을 개인용함.
자료: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곡물 471만 톤 생산...전년대비 소폭 감소」, 보도자료, 2017. 12. 21.

4) 2017년 북한의 농업생산 추세 및 이의 함의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을 참고하라.

2017년의 가뭄은 북한의 수력발전 등 전력 생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관찰된다.⁵⁾ 그리고 이로 인해 소폭의 화력발전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 생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따른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의 제한과 같은 대외무역에서의 요인들로 인해 광업과 건설업의 생산 역시 크게 증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2016년 300일 가까이 진행된 이른바 속도전의 정책적, 실물적 부작용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체 또는 위축이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속도전은 예년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생산과 투자활동을 증가시킬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특히 속도전의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의 조정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2016년의 속도전은 거의 연중 내내 지속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산업정책이 경기확대보다는 안정화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제까지 추진되었던 대규모 주택건설과 같은 건설·토목분야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8월 이후 무역부문에서의 대중수입이 줄어들면서 산업 생산을 위한 자본재 수입 역시 위축되어 전반적인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 전반의 산업 생산용 투자활동이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시장 — 아직은 안정적!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및 산업 생산, 그리고 농업활동은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위축되었고, 특히 이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시장활동 동향은 이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⁶⁾

우선 2017년 북한의 환율 및 시장가격은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2017년 연중 내내 달러당 8,000~8,150원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2017년 초반에 달러당 8,000원 수준이었던 시장 환율이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2017년 12월에 8,000원 수준으로

5) 본문에서 서술된 2017년 북한의 산업생산 동향은 주로 이석기,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에 의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 논문의 해당 서술 일부를 그대로 위의 본문에서 인용하지만 편의상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용 표시는 하지 않는다.

6) 본문의 북한시장 동향 관련 서술은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에 의존하고 있다.

회귀함으로써 적어도 시장 환율에 있어서만큼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시장 쌀가격의 변화 추이 역시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반적인 수준은 대체로 kg당 5,000~6,000원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시장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는 2017년 하반기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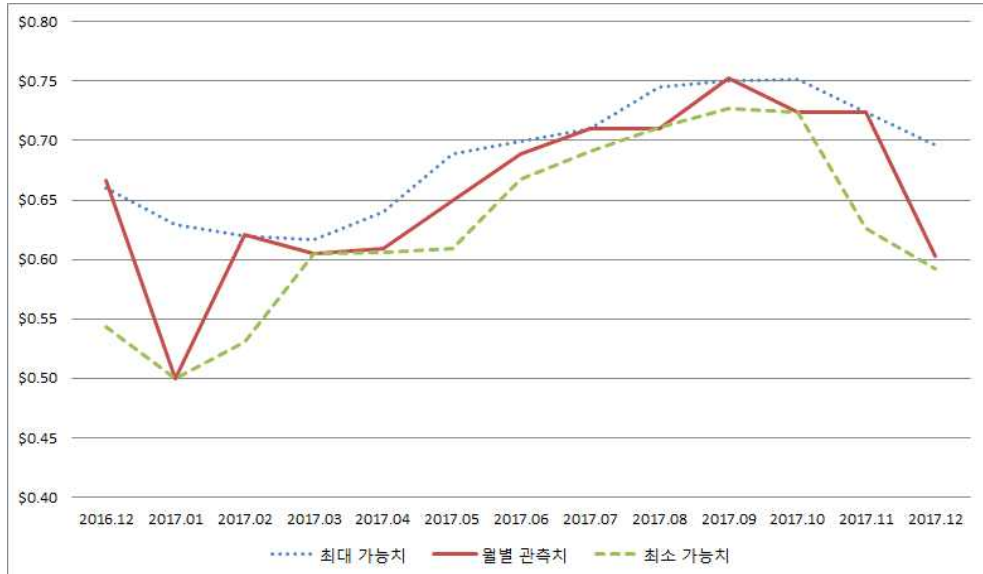
물론 대북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유류가격은 2017년 내내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유류가격은 5월 이후 9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9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채택되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자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였다. 대북 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10월 말에 kg당 휘발유 가격이 최대 21,78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12월까지 다시 15,990원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대북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유류 품목의 시장가격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 등은 2017년 내내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북한의 시장 환율 추이



자료: 「Daily NK」의 「北 장마당 동향」 수치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함.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2018.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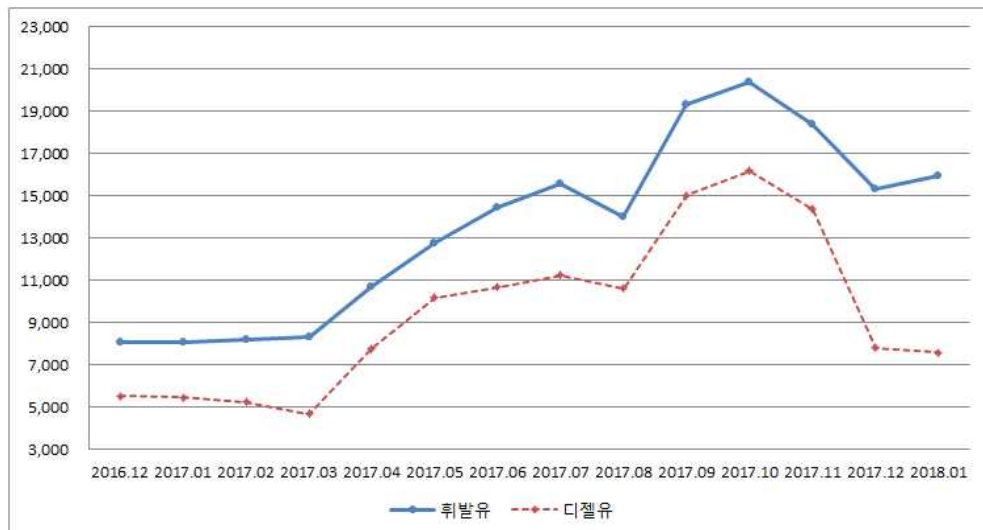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이



자료: 『Daily NK』의 「北 장마당 동향」 수치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함.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2018.2.22).

[그림 3] 북한의 유류 가격 추이

(단위: 북한원/kg)



자료: 『Daily NK』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함.

이러한 현상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활동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일부의 관찰자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의 판로가 막힌 무연탄 등 북한의 생산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2017년 북한의 무역과 산업 생산 등이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서만은 여전히 새로운 생산활동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업활동이 등장했다고 한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한 주요 도로 주변에 주유소와 세차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차장 서비스 같은 영업활동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7년의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과 이로 인한 시장거래 감소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현실의 데이터로 직접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성적 정보 역시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로는 2017년 북한의 시장활동은 다른 여타의 경제 분야와 달리 심각한 침체에 시달리거나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력이 전면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4. 2017년 북한경제 — 제재의 충격과 침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세계에서 관찰되는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대외무역의 침체와 궤를 같이 하듯이 북한 내부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전년에 비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셋째, 다만 이러한 대외무역, 산업 및 농업 생산과는 구별되게 북한의 시장활동은 2017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대북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류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시장가격과 환율, 경제활동에서의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III. 2018년 북한경제 전망: 추세와 요인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제재는 이미 2016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었다. 다만 2016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의 영향이 아직 크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의 추세로 연결하면, 그것은 바로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의 현실적 영향력 역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당연히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는 한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직관을 토대로 2018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검토한다.

1. 대외무역 — 버티기 vs. 파국

먼저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대북제재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시 말해 현재의 대북제재가 2017년 하반기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실제로 집행된다면, 올해 북한의 수출은 오히려 2017년 하반기보다도 더욱 위축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사실상 북한의 모든 중요 수출품의 거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 북한의 대외수출 규모는 예년보다 파격적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3%가 줄어들었는데, 2018년의 경우 이러한 하락 폭이 연중 내내 지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인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과거 2013~16년의 수준은 물론 2017년의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해 보인다.

다만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의 대북제재가 핵과 미사일 부품 및 원유나 정제유와 같은 일부 상품의 대북거래는 규제하고 있지만, 여타의

대다수 북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올해 북한의 수입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수출과 같이 드라마틱할 정도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2018년 북한의 수출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역시 빠르게 감소할 경우, 이러한 외화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표 3>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입과 수출을 대상으로 그랜저 인과성 검증(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5. 24 대북제재 조치가 실시된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이 북한의 대중수입에 일방적인(one-way)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인과적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10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상당 규모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외화가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데 있어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표 3>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사이 그랜저 인과성 검증결과

시차 (월)	2010. 7~2013. 1			2013. 1~2017. 12		
	F-통계량		인과관계	F-통계량		인과관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0.368 (0.549)	18.797 (0.000)	수입⇒수출	1.900 (0.174)	0.719 (0.400)	수입…수출
2	0.199 (0.821)	7.876 (0.002)	수입⇒수출	1.038 (0.361)	0.965 (0.387)	수입…수출
3	0.431 (0.733)	5.991 (0.004)	수입⇒수출	0.765 (0.519)	1.484 (0.229)	수입…수출
4	0.729 (0.584)	3.523 (0.027)	수입⇌수출	0.749 (0.563)	1.388 (0.251)	수입…수출

주: ()안은 p값. →, ⇒는 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과성의 방향을 의미

그러나 2010년 한국의 5. 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의 획득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당연히 2010년 이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해야만 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대중국 수입에 일방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북한은 이제 대중국 수출로 얻어진 외화가 더욱 많이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대중국 수입 역시 늘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에서는 상품 수출입 이외의 여러 새로운 현상들도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보듯이 북한 노동력을 대규모로 해외에 파견하거나, 해외 관광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품)수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여타 형태의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획득하고 축적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북한경제 전반의 외화 사용 수준과 범위가 급격히 늘어나는 2013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의 인과적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역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이 대외적인 (상품)수출입 거래 이외에 다양한 원천을 통해 축적한 외화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상품)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를 위한 (상품)수출을 늘리는 일을 선행시킬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2017년 현재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흥미롭다. 우선 2017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하여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에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비록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이전부터 줄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 획득하는 외화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 역시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여전히 북한경제에는 (상품)수출 이외의 여타 원천을 통해 획득한 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를 통해 비록 (상품)수출이 줄었더라도 일정 부분 수입을 지속할 수 있는

<표 4> 중국 방문 북한인 수 추이

(단위: 만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방문자 수	12.58	11.01	11.37	10.18	10.39	11.64	15.23	18.06	20.66	18.44	18.83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http://www.cnta.gov.cn/>, 접속일: 2016. 1. 18).

여력이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2018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락하여 북한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비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급락하더라도 수입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 일종의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수입 감소가 하나의 일관된 추세로 관찰되고 있으며, 그 감소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아직은 북한경제에서 보유하는 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의 감소 자체가 북한의 외화 사정과 이로 인한 수입규모의 변화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만일 현재와 같은 북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노동자 파견, 투자 및 관광 등 여타의 방식으로 획득하는 외화의 규모 역시 매우 불확실해 질 경우, 북한의 수입규모 역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의 변화에 대한 관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수입에 대한 수출의 일방적 인과적 영향력’이 계량적으로 다시 관찰된다고 가정해 보자. 옹당 이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수출 감소가 북한의 수입 능력에 영향을 줄만큼 기존의 외화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북한경제 전반이 상당한 곤란에 직면할 수 있음도 의미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관계가 여전히 관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 부문에서의 버티기 가능성을 부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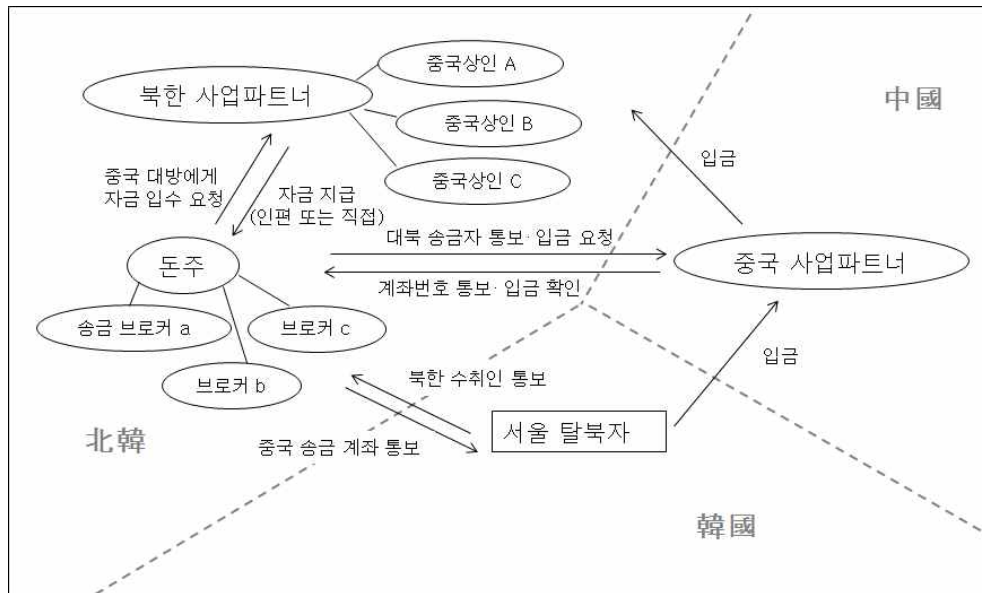
요컨대 현재의 시점에서는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첫째,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급격한 외화 사정 악화를 불러와 수입 역시 빠르게 감소시킴으로써 사실상 대외무역이 파국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기존에 보유하던 외화를 이용하여 수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만 2018년 북한의 월별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과거와 같은 인과적 관계가 다시 계량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북한의 ‘대규모 수출 감소 ⇒ 급격한 외화 수입 감소 ⇒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대외무역의 비상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

2. (비공식) 외화 운영 시스템 — 혼란의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런데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외환과 관련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실사 북한경제가 보유한 외화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화의 통용 시스템 자체가 혼란에 빠져 북한의 대외무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림 4]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른바 북한의 ‘돈주’라고 불리는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외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특정 개인이 한국의 탈북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달러의 외화를 어떻게 북한에 있는 해당 탈북자의 가족에게 전달하는지를 하나의 가상적인 그림 경로로 나타내고 있다.⁷⁾ 이에 따르면, ‘돈주’는 북한의 가족에게 100달러를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탈북자에게 중국에 위치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보한다.

[그림 4] 북한의 비공식적 외화 관리·운용 채널 예시 — 가상적 탈북자 송금



7)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년 연간 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의 북한경제 운영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북한에서 비중 있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던 다양한 탈북자들을 면담하였다. 본문의 [그림 4]는 이렇게 면담한 탈북자들의 진술 내용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를 추상화하여 만든 다양한 그림 모형의 하나이다.

그 계좌는 해당 '돈주'와 연관이 있는 중국인 또는 중국 내의 다른 개인 또는 업체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탈북자가 그 계좌에 100달러를 송금하면, 해당 '돈주'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 사업자가 진출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을 한다. 그 지인 또는 사업 파트너로 하여금 북한의 해당 지역에 나와 있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 사업자로부터 탈북자의 북한 가족에게 전해 줄 100달러 가운데 수수료 2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80달러를 빌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80달러를 북한인 친척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80달러를 빌려준 중국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는 그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보유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수수료 5달러를 더해 총 85달러를 송금하여 결산한다. 이러한 송금은 앞서 탈북자가 송금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부터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돈주'의 수수료 5달러, 북한에서 중국 기업 또는 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업 파트너의 수수료 5달러, 그리고 중국에서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지인 또는 파트너의 수수료 5달러를 분배한다. 이러한 분배 역시 당연히 중국에 존재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그림 4]에 나타난 경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상적인 경로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추상화시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개념적 구축물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재 북한의 외화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며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외화 시스템은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기구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 경제주체들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중국 및 북한에 거주하거나 진출해 있는 중국인, 중국 기업, 중국 금융기관 및 북한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외화를 취급하는 북한의 개인은 물론 대외거래에 종사하는 국영기업과 이의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 각각 다르게 변형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편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 이러한 외화 시스템을 통해 조달되고 운영되는 외화가 정부, 국영기업, 각종 단체 및 개별 경제주체들로 흘러 들어가 전체 북한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더욱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등의 금융제재는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제재로 인해 북한 또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중국 등 해외의 금융계좌에 대한 관찰과 제재가 강력해지고, 북한에 대한 외국인들의 교류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4]에 나타난 북한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 및 사업자가 이제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중국으로 철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해당 ‘돈주’가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 명의가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돈주’는 여전히 안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해당 ‘돈주’는 기존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자신의 외화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더욱 골머리를 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등의 금융제재가 더욱 압박적으로 전개될 경우, 설사 북한경제가 보유한 외화의 절대 규모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이의 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대외무역은 물론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개연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경제를 운영하는 외화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외화보유에 더해, 다양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산업생산과 시장경제활동 — 동시적(?) 침체 또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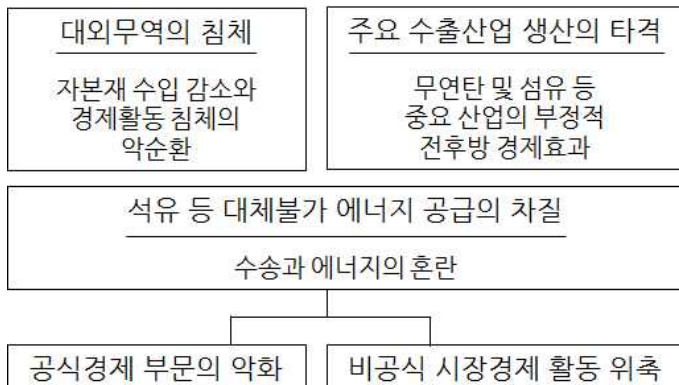
한편 2018년 북한의 산업 생산과 농업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의 활동 역시 2017년보다 침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침체하고, 특히 외화 통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산업 생산 및 농업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해외의 자본재 및 원재료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및 농업 생산의 부분적 회복에는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크게 작동하였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무연탄과 같은 북한의 광물 생산 및 여타의 수출 주력 상품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무연탄과 같은 광물 제품은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가장 전후방 경제효과가 높은 생산 분야이다. 수많은 북한 인력이 이를 채취하고, 운송하며, 보관하고, 수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여타의 지원 분야 인력 역시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연탄에 거의 버금가는 생산 분야가 바로 섬유 등의 생산 분야이며, 고가의 수산물을 위시한 자연채취물의 생산 역시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들 생산

분야가 이제까지 북한에서 유지되고 기능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외화 획득이 가능한 수출 분야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의 수출을 통해 획득된 외화가 북한 당국은 물론, 각 수준의 당과 정부 기구, 일반 기업과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흘러 들어가 공식적인 경제는 물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이러한 무연탄 등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이들 주요 제품의 수출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2018년 북한경제에서 이들 주요 수출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것이 공식적인 북한경제와, 심지어는 시장 등 비공식적인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파장이 클 것이다.

물론 이들 주요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내수로 돌리는 경우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급격히 생산과 수출이 늘어난 무연탄의 경우 이제까지의 생산 확대는 주로 중국의 자본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섬유와 같은 제품의 생산 역시 대부분 중국의 투자와 수요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북한경제로부터 사실상 철수하거나 적어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수출이 막힌 북한산 무연탄의 생산에 중국 자본이 투자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을 대체하여 북한 내부의 돈주들이 이에 새롭게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 북한 돈주들의 투자도 결국은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미 수출길이 막힌 무연탄과 섬유류의 생산에 이들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북한의 산업 생산 및 시장 활동 침체 요인



이렇게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그간 주요 수출품이었던 북한산 무연탄과 석유류 등의 생산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이제까지 북한경제에 미친 전후방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의 생산 차질로 빚어질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러한 파급효과가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은 물론 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8년 북한의 경제활동 전망이 공식부문에서건 시장에서건 결코 장밋빛은 아니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더해 2017년 하반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북한으로의 석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것이 북한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수송용의 경우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한경제가 입게 되는 타격은 미리 가늠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4. 2018년 북한경제 전망 — 악화,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

이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전망해본 2018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매우 암울하다. 우선 2018년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사정에 따라서는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처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받을 충격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어 온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 시스템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들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에 의해 성장하고 유지되어 온 북한의 공식·비공식 경제활동에도 상응하는 장애가 초래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의 산업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 역시 2018년에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왔던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채널이 2018년에는 거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현재 북한경제에서 가장 전후방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는 무연탄과 석유 등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위축이 불가피하며, ③ 수송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원의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경제는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모두 예년보다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부문마저 정체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IV. 결론

본고에서 우리는 ‘2017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쓰인 여섯 편의 각 분야별 북한경제 관련 논문들을 집대성하여 2017년 및 2018년 북한경제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들 여섯 편의 분야별 논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를 세 가지 단어로 집약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 전망’이라는 단어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분석된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과 2018년의 전망은 크게 다음과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우선 2017년 북한경제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궤를 같이 하듯이 북한 내부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전년에 비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시장가격과 시장경제활동은 2017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아직은 제재의 영향력이 시장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2018년의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은 2017년의 북한경제의 모습보다 더욱 우울하였다. 무엇보다 2018년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어 대외무역 전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어 온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져 북한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북한의 산업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 역시 2018년에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외무역을 통한 자본재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무연탄과 섬유 등 전후방 경제효과가 큰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며, 수송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의 공급에마저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8년 북한경제는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모두 예년보다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부문마저 정체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역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이석기,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패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정형곤,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복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조남훈,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